

Left21.com

제95호 | 2012년 12월 24일 ~ 2013년 1월 6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선
고통전가를
위한
지배계급의
결집에

노동자
다경로자
맞서자



정치 권력을 둘러싼 첨예한 양극화가 이뤄졌던 18대 대선은 결국 박근혜의 당선이라는 불길한 결과로 끝났다. 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연대다함계를 비롯한 급진파들은 한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크게 자본주의 위기의 재(再)격화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과, 기존 제국주의 질서의 불안정 심화라는 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치러졌다. 즉, 세계경제 위기로 한국 경제도 더욱 침체하고,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의 효과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강경 보수 정부들이 등장하는 상황이었다.

위기 의식 속에서 한국의 지배계급 전체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할 강성 우파 정부가 필요하다는 컨센서스에 도달한 듯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바라건대, 한국판 마가렛 대처가 됐으면 하는 군사독재 정권의 퍼스트 레이디 출신을 밀어준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북한이 로켓을 빨리 쏘 주면 좋겠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
무심코 드러난 속마음?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람이 주인이다’의 변형”

우익 언론 (데일리안)

“자본주의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자본주의적이다.”

탈세가 자랑스럽다는 구글 회장 슈밋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이 북한 동향 추적할 시간을 뺏었다.”

새누리당 이정현

“북한에 로켓 개발 비용으로 주민들을 먹이라는 [남한 정부의] 이야기는, 남한에 차세대 전투기 비용으로 무상보육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

“조직폭력배가 팔뚝에 ‘차가게 살자’ 문신을 새긴 것”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을 비꼬
이정희 후보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백 58억 … 죽어서도 기억한다.”

손배가압류에 몰려 21일 자결한
한진중공업 조합원의 유서

“[박근혜를] 만나 보면 친근한 큰 누나 같다.”

KBS 앵커 황상무의 박비어찬가

“[안철수 같은] 간신은 죽여 버려야 한다. … 박근혜가 대통령 안 되면 모두 할복해야 한다.”

탈런트 강만희

“선덕여왕 이후 1천3백여 년 만에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여성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역시 여행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건 … 포기하는 게 묘책”

당선 이틀 만에 복지 공약 포기하라는
(중앙일보)

“주어진 대본이나 프롬프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설명하라.”

'수첩공주' 박근혜에게 충고하는
미국 (타임지)

왜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가 끊이지 않는가

잔혹하고 질환에 걸린 체제가 낳는 참극

전쟁터도 아닌 초등학교에서, 6~7세 아동, 교사, 교직원 등 총 28명이 폐죽음을 당했다. 12월 14일 미국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는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둘째로 많은 사망자를 냈고,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었다.

어떤 아이는 무려 11발이 넘는 총탄을 맞았다고 한다. 아이들을 지키려다 희생된 교사,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총소리 쪽으로 달려간 상담치료사 등 한 명의 명의 이야기가 비극이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가?

가장 흔한 제기는 범인인 아담 랜자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이다. 많은 언론은 랜자가 자폐아라거나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둥 추측을 날발했다. 총기수집광인 랜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랜자의 정신은 분명 온전치는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28명을 잔혹하게 학살한 사람이니 말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총기 난사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상황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사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범죄의 가해자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살인은 전체 살인 사건의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미국인의 약 25퍼센트는 한 번 이상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컴퓨터 게임을 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연구 결과는 그 반대를 보여 준다. 사상 최대 규모의 희생자를 낳은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를 비롯해 여러 총기 난사를 연구한 크리스토퍼 퍼거슨 교수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미심쩍은 연구 조사 결과와는 달리, 총격 가해자들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미국에서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 수는 공식 통계로도 2억 5천만 정 이상으로, 전 세계 민간인 보유 총기 수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유통 총기까지 생각하면, 모든 미국인이 한 자루 이상의 총을 갖고 있는 꼴이다.



사진 출처 JOSALEE THURFT (플리커)

실업과 가난, 소외 정신병과 컴퓨터 게임에 총기 난사의 책임을 미루는 지배자들의 말은 가증스런 거짓말이다.

이렇게 총이 많으니 총기에 의한 살해가 일어나기 더 쉬운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에만 9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총에 맞았다.

그런데도 미국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한사코 반대한다. 미국 민주당이 제안하는 총기 신청 절차 강화, 대용량 탄창 추가 생산 금지 등도 몹시 파괴죄한 수준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총기와의 전쟁’을 꺼린다. 아마도 전미총기협회와 군수회사들의 대대적인 로비의 영향이 클 것이다.

공포

총기 사용 지지자들은 공포와 범죄에 노출된 평범한 사람들이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을 품도록 부추기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 불신이 사회에 만연하면, 노동계급이 단결하기 힘들어진다.

그런데, 의료 과실 사망자가 있다고 해서 의학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듯, 총은 살해의 도구일지언정 원인은 아니다. 미국처럼 총기가 합법이고 총이 수백만 정

풀려 있는 캐나다의 총기 살해 희생자 수는 미국의 1.5퍼센트밖에 안 된다.

죄를 박멸하려면 쥐가 번식하는 하수구도 청소해야 한다. 총기 범죄를 박멸하려면, 왜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끝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으로 내몰리는지를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노동자·서민은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데다, 인종·성에 따른 차별에 늘 시달린다. 실업과 빈곤은 범죄를 낳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가난 그 자체가 노동자·서민에게 절망이고 공포다. 가난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소외감을 깊게 한다.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인 네 명 중 한 명은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17명 중 한 명은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린다고 한다. 절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결말로 치닫는다.

가난과 소외가 만연한 나라에서 국가당국이 앞장서서 군사주의적 문화를 구축해 왔다. ‘서부 개척 시대’ 이래로 수백 년 동안 갈등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소해 온 ‘미국적 전통’은 제국주의 역사 속

에 더 강화됐다. 빈곤과 소외에 찌든 개인들이 이런 문화에 동조하면서, 무차별 총기 난사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증오를 ‘해소’하려 들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뉴욕 시장 블룸버그 같은 자들이 총기 규제를 떠들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 사실, 범죄를 방지한다며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다. 블룸버그는 개인 재산이 2백5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하는 갑부로, 자신이 삭감한 복지 예산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버락 오바마는 감동적인 연설로 심금을 울렸지만, 무인전투기로만 파키스탄 아이 1백68명을 학살한 ‘총기 난사 국가’의 수장이 이 비극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큰 신뢰가 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총기 난사 같은 비극을 진정으로 방지하려면, 그 뿌리인 가난과 소외를 쏘여내야 한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설 때, 모두에게 절망만 낳는 비극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김인수

삼성반도체

끈질긴 투쟁이 두 번째 산재 인정을 받아내다

최근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했다가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김모 씨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삼성반도체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지난 4월 김지숙 씨에 이어 두 번째다. 게다가 유방암에 대한 산재 인정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다.

이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족 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의 끈질긴 투쟁이 낳은 또 한 번의 성과다.

고인은 1995년부터 4년 9개월간 방사선 측정계도 지급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며, 벤젠·TCE 등 발암 물질과 유기 용제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방암 발병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된 주·야간 교대 근무에 시달렸다.

이런 그가 직업병을 인정받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지금껏 근로복지공단이 보여준 삼성 비호와 잦은 산재 불승인은 고인에게 고통을 안겨 줬다. 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태도 때문에, 살아 생전에

산재 신청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껏 한 번도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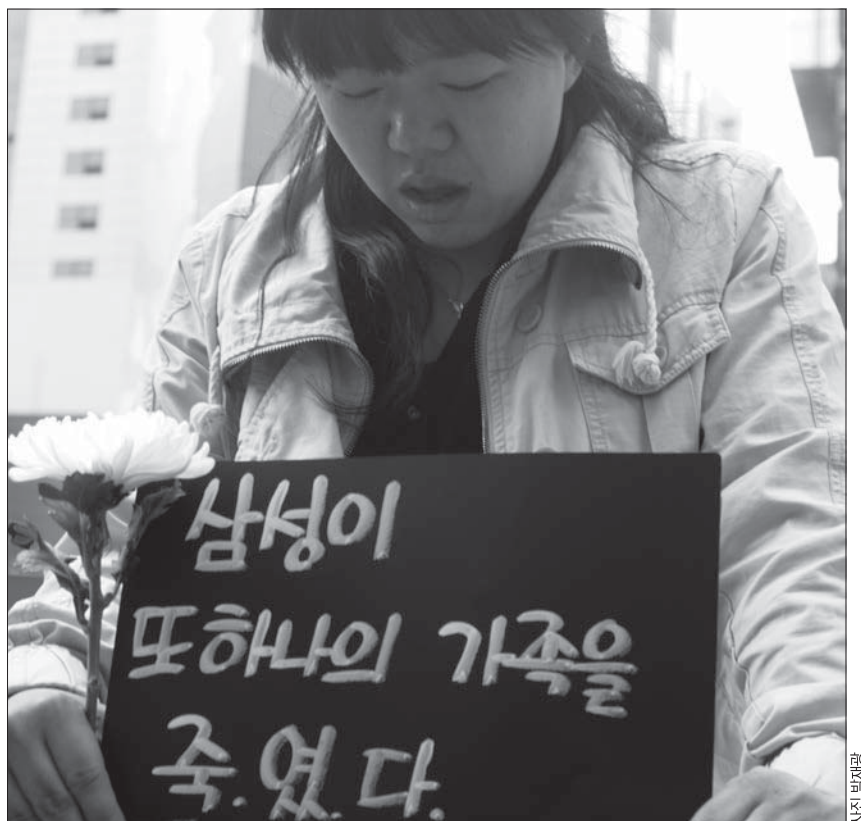
고인은 겨우 용기를 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국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유족들은 “생전에 좀 더 일찍 산재를 인정받았으면 신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한 번에 3백만~4백만 원씩 드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유방암이 발병됐다고 반올림에 제보한 노동자는 열 명에 이르고, 그중 두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인정 폭을 대폭 넓히고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더 적극적인 재해 예방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박소연



윤보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정직하게 산재 인정을 해 왔다면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2013년 1월 7일부터)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6:45~8:40
인천 주안역 남광장 오후 6:40~7:40
고려대(안암) 정경대 후문 오후 1:00~2:00

격주 화요일(2013년 1월 8일부터)

서울 강남역11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오후 7:00~8: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오후 7:00~8:0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오전 11:30~12:30

격주 수요일(2013년 1월 9일부터)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오후 7:00~8:00
충남대 공대2호관 앞(목문) 오후 12:30~1:3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점(건국대입), 불무집(성균관대입),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배계급과 우파는 결속한 데 반해 노동계급의 정치조직들은 투표 외엔 사분오열 된 결과

▶ 1면에서 이어짐

지배계급 전체와 모든 우파들이 이 전략의 시행을 위해 박근혜를 당선시키고자 주요 일간지와 방송 3사, 종편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박근혜를 칭송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도 박근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다.

김종필, 이회창, 나경원, 오세훈, 이재오 등이 모두 박근혜 지지에 나섰다. 한 새누리당 인사는 “온건에서 이른바 꼴통까지 보수 전체가 이렇게 일치단결해 치르는 선거는 처음이다. 조금이라도 발을 빼면 역적이라는 분위기”라고 했다. 박근혜는 용의주도하게 우파 결집을 유지했다. 노무현의 NLL 발언을 문제 삼으며 색깔론을 폈고 북한의 로켓 성공도 그 목적에 이용했다.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의 분열

정치 양극화의 왼쪽 그림은 이명박 5년에 대한 분노와 박근혜라는 강경 우파 집권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문재인에게 표가 결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적 개혁주의 정당인 민주당의 문재인은 ‘독재 정권의 후예이자 재벌친화 세력인 박근혜와 새누리당만은 막아야 한다’는 노동자와 천대받는 사람들의 위기 의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막판의 광화문 유세에서 문재인은 “쌍용차와 용산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물론 다소 막연한 말이다)고 약속했다.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의 양자택일 구도, 진보정당들의 분열과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한 반감은 문재인에 대한 투표로 나타났다.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서가 일반적이었다. 계급 간 정치투쟁은 그 지형이 다소 오른쪽으로 이동해, 박근혜 투표나 문재인 투표나 사이의 ‘좌·우’ 양극화로 나타났다.

그래서 문재인이 얻은 표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이 얻었던 표보다도 2백 70만 표 더 많은 1천4백70만 표였다. 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썩 내키지 않으면서도 차악으로서 문재인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배계급과 우파의 총결집 덕분에 박근혜가 얻은 지지를 능가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근 정치사에서 그나마 자본주의적 개혁주의 정당이라도 집권할 수 있었던 경우는, 경제나 정치의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이 분열한 반면 노동자들이나 다른 천대받는 사람들이 거대한 대중 투쟁으로 힘을 과시할 수 있었을 때였다. 김대중은 1996년 연말과 1997년 연초의 민주노총 총력 파업과 IMF 공황이라는 격변 속에서야 겨우 1.6퍼센트 차이로 이회창을 꺾을 수 있었다. 노무현도 40만 쉼표 시위 덕분에 ‘노풍’이 일어나 겨우 2.3퍼센트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가도에서 노동운동은 그런 힘과 잠재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개혁주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번 경우에는 노동계급에 기반한 정치조직들이 통합진보당 사태를 포함한 심각한 반목으로 사분오열 상태였다. 따라서 계급적 대립을 내포한 이번 ‘좌·우’ 대결 구도에서 진보정당들은 전혀 왼쪽 축을 형성하지 못했다.

올해 총선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정치 양극화가 새누리당의 우파 결집으로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의석 수 배가로 나타났다.



첨예한 양극화 속에서 치러진 박빙 선거 박근혜는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1천4백70만 명의 박근혜 혐오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곧 자책골을 넣었다. 내부 선거 부정 파문 속에서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당내 스탈린주의자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한사코 포기하지 않으려 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내분과 우파의 마녀사냥으로 식물 정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고, 통합진보당은 쪼개졌다. 이 후유증 속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전현직 상층 간부들이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로 대거 이동했다. 노동운동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내놓지도 못했고, 단결된 대응을 하지도 못했다.

선거에 반영되는 계급세력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계급투쟁 수위도 충분치 않았다. 물론 노동운동은 2008년 촛불운동과 경제 공황 이후 싸울 수 있다는 자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올해 8월 현재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73만 1천5백28일로,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 중간계급의 다수를 견인할 만큼 강력한 힘을 보여 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는 “중간계급은 극단주의에 놀라 뒤로 나가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결연한 지도를 제공하는 사회 세력에 끌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대로 지배계급 전체와 모든 우파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뿔뿔 뿔쳐서 힘을 보여 주는 상황은 중간계급의 다수를 견인하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확고하게 단결해서 좌파와 노동계급 단속을 기대할 만하게 하는 우파가 미답게 여겨졌을 것이다.

순탄치 않을 박근혜의 앞날

박근혜 정부의 등장 앞에 조직 노동자들과 진보파 청년들은 한동안 사기 저하와 방향감각 상실을 겪을 것이다. 이명박보다 더 선명한 우파인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분명 좌절스러운 일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5·16군사쿠데타와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 등이 불가피했다고 여기는 이들이 박근혜 세력의 핵심에 도사리

고 있다.

그리고 우파 정권 재창출은 공식 정치에서 우파의 주도권이 더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는 그 여세를 몰아서 사회의 전반적 세력균형을 더 오른쪽으로 돌리며 애쓸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과 능력, 이윤율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계급을 더 쥐어짜고 내뿜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이미 내년 예산에서 복지비 비중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복지 지출 증가율도 낮아졌다.

또, 박근혜 정부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가하는 압력 속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일 3각동맹 강화 등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다.

노동운동이나 NGO와의 연계가 없는 박근혜가 이런 과제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행한다는 것은 미사여구일 뿐이다. 오히려 박근혜 세력의 핵심을 이루는 김무성 같은 ‘공안’ 세력이 ‘친보좌파’와 급진좌파에 대한 탄압과 마녀사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노동계급과 좌파 정치조직들이 한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그다지 오래지 않아 반전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결국 부르게 마련인 정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공격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는 노동운동을 통제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지배계급과의 약속은 지키려 애쓰겠지만, 복지와 분배에 대한 우익 포퓰리즘적 약속은 대부분 휴지통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중간계급 지지자들은 실망하고 이반하기 시작할 것이다.

부패 문제로 박근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국고로 환수돼야 할 거액의 돈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일과 정수장학회 문제에서 보듯이 박근혜 자신이 부패의 원조다. 부패 문제는 지배자들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것이고, 그러면 책임 전가에 급급한 지배자들은 쉽사리 내분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대선 가도에 부패 문제

이제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새 정부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고 저항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은 분열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절망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 노동자들의 일상적 조직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치 지도부들이 분열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권력 상상의 지지자들은 박근혜 집권을 보며 충격을 받은 노동계급 속에서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이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박근혜의 공격에 맞서는 광범하고 다양한 공동전선 건설 과정에 함께해야 하며, 민주당의 왼쪽에서 진보정당을 재건하고 성장계 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하고 동참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전반적인 계급 세력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과대평가하거나 장애물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견해 내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



서울 교육감 선거 평가

진보가 단결해 교육개혁 후퇴에 맞서자



살을 에는 추위에도 서울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한 선거운동원들 이들의 노력은 향후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 건설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박근혜 맨'이자 '사교육 대변자'인 문용린이 당선됐다. 지난 2010년 서울 교육감 선거와 비교했을 때 보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을 합치면 오히려 줄었지만 문용린은 협박과 회유 등으로 이상한 후보를 주저앉히고 보수를 결집시켜 당선할 수 있었다.

문용린은 선거 초반에 “무상교육”, “중1 시험 폐지”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놨지만 이내 색깔론과 반전교조 선동을 강화하며 우파를 결집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근혜도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문용린을 거들었다.

이렇게 보수가 결집한 덕분에 문용린은 54.17퍼센트를 얻었다. 문용린이 획득한 표는 박근혜가 서울에서 얻은 표와 거의 비슷했다.

반면, 이수호 후보는 2백만 표

조금 못 되게 얻었다(37.1퍼센트). 이것은 지난 2010년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박노현 전 교육감이 얻은 표보다 52만 8천 표가량 더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 정치 운동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더 나았을 수 있다. 물론 진보진영의 상당수가 이수호 후보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후 벌어진 통합진보당 위기와 분열의 후유증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민주노동도 이수호 후보를 민주노동 지지 후보로 결정했지만, 내부적 균열과 갈등 때문에 교육감 선거 운동에 늦게 착수했고 충분한 조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노동계급이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결과 나머지 동요하는 세력을 충분히 이수호 후보 쪽으로 끌어

당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수호 후보는 서울에서 문재인이 얻은 표의 3분의 2 정도만을 얻었다. 1백만 명가량이, 문재인에게 투표했지만 이수호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은 것이다. 조직 노동계급의 단결력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고 민주당이 전교조와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문용린의 반전교조 선동은 일부 후진적인 민주당 지지자에게도 영향을 미친 듯 하다.

이는 무효표가 87만여 표(14퍼센트)가 나온 이유 중 하나다.(무효표가 이렇게 많은 또 다른 이유는 교육감 선거가 대선에 묻혀 ‘깜깜이’ 선거가 되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정보가 거의 없는 채로 투표장에 들어갔거나, 사퇴한 이상현 후보에게도 적잖은 사람들이 투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수호 후보는 결코 적지 않은 득표를 했다.

이 후보는 2010년 박노현 전 교육감이 얻었던 34퍼센트보다 더 많은 37퍼센트를 득표했다. 이는 진보 교육 개혁을 향한 대중적 열망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다가 이수호 후보는 노동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좀더 선명한 진보 후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폄하할 수는 없다.

현재 문용린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무상급식 예산도 재검토”하겠다고 반동적 공격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전교조 지도부 선거에서는 투쟁을 강조한 상대적 좌파 후보가 이겼는데, 이를 바탕으로 저항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문용린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확인한 지지와 연대는 향후 투쟁을 건설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선영

좌파 지도부가 당선한 전교조 선거

숨막히는 교육을 바꿀 행동과 연대를 건설하자

12월 5~7일까지 진행된 전교조 위원장과 지부장 선거에서, 전교조 내 좌파인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경향의 김정훈·이영주 후보가 당선됐다. 또 ‘참실련’(참교육실천연대) 경향과 교찾사 경향이 경선한 6개 지부를 포함해 모두 9개 지부에 교찾사 경향의 지부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교찾사 경향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다수가 됐다.

이처럼 교찾사 경향이 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것은 전교조 역사상 최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먼저 득표를 분석해 보면, 지난 15대 위원장 선거와 비교할 때 참실련의 표가 대량으로 줄어든 것이 교찾사 경향이 승리한 이유였다. 참실련 지도부가 지난 6년간 전교조 지도부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자, 그 실망이 상대적인 좌파 후보의 지지를 상승으로 나타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경제 위기는 사람들의 고통을 키워 왔고, 그 속에서 교사들의 고통도 지속·증가했다. 일제고사와 성과급 등 경쟁과 통제 위주의 정부 정책은 계속됐고, 교사들은 심각한 업무량으로 고통받았다. 같은 시기 전교조 등에서 실시한 여러 조사들에서 교직 만족도는 수직 하락했다.

그러나 참실련 경향의 현 장석웅 지도부는 투쟁 건설보다는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전략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성과급 문제를 학교 분회 차원의 균등분배로 맡겨 버리는 등 투쟁 건설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점점 커졌고, 이명박 정부의 탄압까지 이어지면서 조합원 수는 6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또한 지난 6년간 참실련 경향이 전교조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진보교육감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였다. 전남에서는 진보교육감의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참실련 경향의 득표가 대폭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건한 실천을 해 온 황호영·남궁경 후보를 상대해 투쟁을 강조한 김정훈·이영주 후보가 더 큰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 특목고 등 경쟁교육 폐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확충과 교원 잡무 폐지, 수업 일수 시수 감축을 거론하며 열의 있게 투쟁을 건설해 온 김정훈·이영주 후보는 팍팍한 교육 현장을 바꾸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에 부합할 만했다.

여기에 최근 조직을 확대하고 파업 등 투쟁을 건설하며 성과를 거둔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우리에게도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상대적으로 좌파 후보의 당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교육에서 경쟁과 통제를 강화하고, 교사와 학교비정규직을 구조조정하며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 당선한 전교조 지도부는 이에 맞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투쟁과 연대를 건설하며 정부의 탄압과 지도부의 투쟁 방지 속에 약화된 분회와 지회 등을 튼튼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정훈·이영주 후보를 지지했던 활동가들은 이제 상대적 좌파 지도부의 당선을 이용해 현장에서 교사 노동자들이 스스로 행동을 건설하는 진정으로 중요한 과제에 나서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교사

우파 집권이 반드시 운동의 침체를 낳진 않는다

국제적·역사적 경험

적지 않은 이들이 박근혜가 당선해 절망감을 표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례를 살펴 보면,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이 제대로 단결해 대처하기만 하면 우파 정부가 쉽게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 준다.

미국에서 국제적 증오의 대상이던 부시가 4년 집권 후 2004년 말에 다시 집권했을 때도 미국의 반전운동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2005년 9월 워싱턴에서 개

최한 반전시위는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더 많은 반부시 운동들을 자극했다.

이런 압력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부시 탄핵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결국 2006년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은 참패를 하고 레임덕에 빠지고 만다.

1981년에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국유화와 복지 강화를 내걸고 집권했으나 자본가들의 압력에 굴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다. 환멸의 자리를 채운 것은 1995년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이긴 우파 공화국연합의 집권이었다. 우파 정부는 그해 11월에 공공부문 민영화와 연금 삭감 등을 담은 복지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자들은 12월 12일에 대규모 행진을 했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3주간 파리를 완전히 마비시킨 “뜨거운 겨울” 파업에 나섰다. 우파 정부의 복지 삭감 계획은 완전히 철회됐고, 3년 뒤 우파 정부는 다시 사회당에게 정권을 내줬다.

한국에서도 1987년 민중항쟁의 성과

물로 실시된 직선제 선거에서 전두환 독재 정권의 계승자인 학살자 노태우가 당선됐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민중항쟁이 열어놓은 공간 속에서 폭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민주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빈민운동 등이 전투성을 유지하며 전진한 결과, 노태우는 5공비리와 광주학살 청문회를 생중계해야 했고, 자기 손으로 친구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 보내야 했다.

민주화 항쟁이 곧바로 자신을 대표할

정권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의 각종 개혁을 쟁취했고, 노동자들은 노태우 정부 초기 몇 년간 해마다 20퍼센트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쟁취해냈다.

우리가 비록 이번 선거에서 우파 정권의 연장을 막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단결력을 강화하며 참을성 있게 저항을 건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파 정부의 연장이 꼭 반동적 미래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

김문성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얼마 전 유엔은 “내년[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전망이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로 인해 어둡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한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물론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출범하고(지원한도가 5천억 유로로 위기에 비해 규모가 충분하진 않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으로 위기 국가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연말 들어 위기를 어느 정도 봉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포르투갈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도 재정긴축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모순된 처지에 놓여 있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악화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은 국가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 2013년 중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확률이 높고, 이탈리아도 국채를 대규모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실사 유럽 위기가 당장에는 심각하게 악화하지 않더라도,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수요가 줄면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도 올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 ‘재정절벽’에 따른 급격한 경기 후퇴에 대한 지배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오바마와 공화당이 재정지출 삭감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일부 인상하는 대신 의료비 등 재정지출을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듯하다. 그러나 어떻게 합의하든 재정지출 증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한국 경제 경기 악화로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제도는 매월 4백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매월 4백50억 달러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연방준비제도 자신이 2015년은 대야 양적완화 정책과 저금리를 거둬들일 만큼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던 중국 경제는 2012년 2분기부터 성장률이 7퍼센트대로 떨어지며 경착륙 위험이 커졌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등을 고려하면 당분

간 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

중국 정부는 내륙 지역의 인프라 투자, 소비세 인하 등으로 조금씩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는 힘들다.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이 다시 폭등해 거품을 키울 수도 있고, 철강·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부문 등에서 ‘과잉투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유로존 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경착륙 등 커다란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3년 경제는 올해보다 안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

가 계속되면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 부양

이 때문에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기업인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 ‘경기부양’(35.6퍼센트)이 가장 많이 나왔다. 박근혜도 “주경 편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라며 경기부양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기업을 살리는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경제 위기의 고통

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위기가 심각했던 2009년에도 한국 지배자들은 4대강 사업이라는 경기부양책을 쓰면서도, 비정규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동결·삭감하면서 기업 수익을 만회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조선·해운 부문과 최근 업황이 악화하고 있는 금융 부문, 그리고 GM이나 르노삼성처럼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구조조정이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

게다가 2013년에 경기가 악화하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비정규직이 해고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09년처럼 취업자 수 자체가 줄어 들 수도 있다.

그럼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청년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2012년 11월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2011년 11월 대비 7만 9천 명이 줄어 7개월 연속 하락했고, 20대 고용률도 2011년 11월 58.7퍼센트에서 57.1퍼센트로 1.6퍼센트포인트나 감소했다.

대선이 진행되면서 일단 미뤄졌던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꽤 있다. 우리은행 매각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인천공항, 철도, 전기, 가스, 물 부문 등은 민영화를 원하는 기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도 상당히 유혹을 느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의 이런 공세에 맞선 투쟁뿐 아니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투쟁, 그동안 정체해 온 임금을 인상하려는 투쟁, 복지확대 요구가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뒀어야 한다.

진보진영이 이런 투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박근혜 정부의 반동 시도를 막고 경제 위기 속에서 대중의 삶도 지킬 수 있다.

강동훈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자본주의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얼마 전 SBS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The last of capitalism)〉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빈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보여 줬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 결국 아이들과 조그만 승용차 안에서 생활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가족, 배고픈 아이에게 햄버거를 사 줄 돈이 없어 호느끼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미국이 10여 년 전인 2001년부터 지출한 ‘테러와의 전쟁’ 비용이 생각났다. 미국 내 무상 주택 8백만 채 건립 비용, 4천3백만 명의 대학 등록금, 전 세계 어린이 5억 3천만 명의 건강보험 비용이 전쟁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다면, 경제 위기가 낳은 끔찍한 고통이 저만큼은 아니지 않았겠는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경제 위기와 전쟁이 어떻게 고통지수를 높이는지에 관한 문제는 단지 2008년 이후 미국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 위기는 전쟁으로 이어지며 더 깊고 끔찍한 고통을 낳곤 했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1929년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2차세계대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 자본 경쟁의 뿌리를 뽑아야 전쟁의 끔찍한 고통도 막을 수 있다.

이 필요했다. 21세기의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이 추락하는 경제적 위상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의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할 “기회의 창”이 될 거라 여겼다. 끔찍한 파괴와 살육을 낳는 전쟁이 기회로 여겨진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경쟁하는 다수 자본”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것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과정이다. 자본은 판매시장과 원자재 확보, 생산기지 장악, 투자협정 체결 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윤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군사적 경쟁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쟁을 낳는다.

그런데 이런 전쟁 유혹은 경제 위기 시대에 더 강력하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자본가들의 방식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가치 창

조의 원천인 노동력보다 기계를 더 많이 늘리는 자본가들의 경쟁적 축적 때문에 이윤율 저하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것을 상쇄하는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가치 파괴다. 자본이 망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동적 축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 파괴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 헨리크 그로스만은 제국주의 팽창과 연관 속에서 전쟁이 자본 파괴를 통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늦추는 효과를 낸다고 잘 지적했다.

세계경제 위기가 깊어질수록 “세계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고 가치의 이전[이윤]을 독차지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국가는 국내 독점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수단들을 더욱 경쟁적으로 활용한다. 수입 관세 부과, 통화 가치 하락 등의 무역 장벽 강화 등이 그로스만이 든 사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군비 지출을 통해 “경제적 경쟁을 폭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로스만은 이런 경향이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 해당되지만, 특히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열강들 사이의 지위가 바뀔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지위가 이전보다 낮아졌거나, 빠른 공업 발전을 이뤘지만 기존의 열강에 견줘 지위가 취약한 나라들이 먼저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1백 년 전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미 21세기 들어 석유와 패권을 위한 큰 전쟁이 두 차례나 있었다(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근래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 전쟁·무역분쟁은 격화되는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과 뿌리가 같다.

따라서 자본 경쟁의 뿌리를 뽑아야만 전쟁의 고통이 가저울 끔찍한 미래를 막을 수 있다.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낭비하는 인간 에너지를 해방시키려면 자본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군사적 경쟁에 퍼붓는 막대한 에너지를, 의식주뿐 아니라 협력적이고 즐거운 생산활동들과 교육·여행·예술에 쏟도록 할 책무가 우리의 어깨에 놓여 있다.

김이진

유로존 — 위기와 함께 저항과 좌파도 성장하다

2012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에 맞선 저항이 가장 참예하게 드러난 지역은 바로 유럽이었다. 유럽 경제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때때로 큰 악재들이 터지면 부라부라 땀질해서 한숨 돌리다가 이내 또 다른 공포가 엄습해 오는 상황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졌다.

게다가 위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전염되고 그리스 등의 정부 부채는 줄지 않았다. 옆친 데 댔친 격으로 사실상 유럽 경제를 지탱하는 독일 경제의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유로존 제조업 생산이 감소 추세에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타개책을 둘러싼 유럽 지배자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리스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합의를 하지 못해 회의가 두 차례나 연기됐다.

물론 지배자들이 다투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기자는 데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한다.

경제 위기와 지배자들의 긴축 강요에 유럽 민중의 삶은 점점 비참해졌다. 실업률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4명당 1명이 실업자고, 청년들은 절반이 실업자다. 유럽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빈곤층이다. 특히 거의 10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할 수 없는 등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계속 늘었다.

다른 한편, 유럽 민중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긴축에 맞서 인상적인 투쟁을 벌이며 희망도 있음을 보여 줬다. 연초부터 반긴축 시위의 압력에 밀려 루마니아 정부가 무너졌다.

사실 경제 위기가 자동으로 투쟁을 불



긴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양되면서, 반자본주의 좌파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스페인 반긴축 시위.

러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내분, 민중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의 심화가 맞물리면서 몇몇 나라에서 강력한 운동이 성장했다.

여기에는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랍 민중의 혁명과 반란도 한몫했을 것이다. 예컨대 스페인에서는 2010년 말 노조 지도자들이 배신적 타격을 하면서 스페인 노동자 사이에 비판적 정서가 확산했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에 영감을 받은 청년들이 2011년 5월 도심을 점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를 배경으로 지난 3월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 분위기는 6~7월 광원 노동자 파업, 마드리드에서만 10만 명이 참가하

는 대규모 반긴축 시위로 이어졌고, 9월에는 다시 총파업이 일어났다.

투쟁 수준이 가장 높았던 곳은 그리스였다. 2010년 이후 평균 6~7주마다 총파업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점거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하면서 노동자 통제 of 행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런 강력한 투쟁으로 2011년과 지난 2월 두 차례나 정부가 무너졌다. 6월 총선에서 가까스로 집권한 신민당 중심의 연립정부도 오래지 않아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 민중의 투쟁은 하반기에 매우 고양됐고, 11월 14일에는 유럽 23개 나라에서 국경을 가로질러 긴축에 맞선 공동

총파업과 시위가 일어나면서 노동자 국제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경제 위기 해법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으로 정치적 양극화도 더 첨예해졌다.

양극화

오른쪽으로는 파시스트가 성장했다. 그리스에서 황금새벽당은 6월 총선에서 7퍼센트를 득표해 사상 최초로 의원을 배출했다.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대선에서 사상 최다인 18퍼센트를 득표했다. 파시스트들은 서방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퍼뜨린 이슬람 혐오증, 주류 우파 정당들의 우경화와 인종차별 정책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왼쪽에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는 프랑스 사회당이다. 전통적 개혁주의 세력인 사회당은 17년 동안 야당으로 밀려나 있다가 반긴축 여론에 힘입어 지난 5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왼쪽으로는 급진화를 분명히 보여 준 것은 유럽 급진좌파의 성장이다. 프랑스 좌파전선의 장뤼크 멜랑송은 긴축 반대, 최고임금제 도입 등 급진적 강령으로 대선에서 11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의 총선 득표율은 2009년 4.6퍼센트에서 지난 6월 27퍼센트로 경종 뛰었다.

유럽 급진좌파는 그동안 주류 개혁주

북한 로켓 발사 성공 — 오바마·이명박이 만들어 낸 위험

위선적 대북 제재는 긴장만 더 키울 뿐이다

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광명성 3호 2호기를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1998년 처음으로 위성 발사를 시도한 이래, 4번째 만에 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가능성도 보여 줬다. 물론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몇 가지 기술적 진전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남한의 나로호 개발을 지지하지 않았듯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 개발도 지지할 수 없다. 인민이 식량난에 고통받는 와중에 막대한 자원을 핵과 로켓 개발에 쏟아붓는 것은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 줄 뿐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은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발사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됐다.

북한이 먼저 핵부터 포기해야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

내”는 북한 지배자들의 반발만 초래했다. 지난 4년 동안 북미 관계는 “제재와 핵실험, 제재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제재의 정면충돌”로 진행됐다. 북한은 2009년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는 농축우라늄 시설 가동과 경수로 건설로 이어졌다. 여기에 2012년 두 차례의 로켓 발사를 더해야 한다. 즉,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은 북한 지배자들이 로켓과 핵무기 능력을 높이는 데 더 매달리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이명박 정권과 오바마 정권은 대북 적대 정책이란 면에서 서로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이번 로켓 발사 성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파탄 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바마가 집권한 후 중미 갈등이 본격화한 점도 북한 지배자들이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오바마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적극 활용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했고,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가 벌어지자 서해로 항공모

함을 들여보냈다. 그리고 한국에 MD에 공식 참가하라고 촉구하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오바마 정권은 북한을 빌미 삼아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을 꾀했다. 오바마 재선 이후에도 이런 기조가 달라질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력 증강,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 지배자들이 국내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이번 로켓 발사의 중요한 배경이다. 최근 군 총참모장 리영호의 숙청설이 제기되는 등 3대 세습의 불안정 요인이 지속하는 듯한 상황에서, 북한 지배자들은 김정일 사망 1주기에 맞춰 김정일의 “유혼”에 따라 로켓 발사 성공을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하자, 한미일 지배자들은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게거품을 물고 있다. 차기 미 국무장관이 유력한 존 케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한미일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려 한다.

이 밖에도 한미일 지배자들 사이에서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식 금융 제재”나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화 취급을 금지하는 “이란식 제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제재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 제재는 별 효과가 없을 듯하다. 중국이 제재에 협조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 시도는 북한 지배자들의 반발과 충돌을 다시 부를 것이다. “2005년 BDA식 금융제재”가 이듬해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는 점만 봐도,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금융 제재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 더 위험한 일을 초래할지 모른다.

물론 오바마 정부는 농축우라늄 수준을 확인하는 등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이라도 북한과 대화를 마냥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쳐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라도, 긴장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의지가 없다. 북한 ‘악마화’는 앞으로도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돌발 변수 등이 불거져 다시 위기가 고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지배자들은 이번 발사를 기회로 삼아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 로켓을 빌미로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신형 요격 미사일의 개발·배치를 서두르려 한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확보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일본 지배자들도 이번 기회를 핑계로 군비를 더욱 증강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군비 증강,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등과 MD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한일군사협정을 재추진하는 등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강화할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



그리스 반긴축 시위.

의 정당들의 우경화(신자유주의, 긴축 정책 시행)로 생긴 공백을 메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급진좌파는 현재 유럽 노동계급의 반긴축 정서와 투쟁을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는 급진좌파의 성장을 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급진좌파는 개혁주의의 일반적인 한계도 공유한다. 개혁주의는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국가 기구들을 장악해 그 안에서 조금씩 개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아무리 급진적이어도 노동계급의 저항이 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제약하려 든다.

예를 들어, 시리아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 정책을 맹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긴축을 강요하는 EU와의 합의를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연합 안타르시아의 존재와 적극적 활동은 그리스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안타르시아는 그동안 대학과 작업장에서 운동을 건설하고 투쟁을 더 확대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민중을 위한 디폴트'라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파시스트인 황금새벽당에 맞선 투쟁에서도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

2012년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 위기의 영향으로 아래로부터 투쟁이 분출하고, 이 운동들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위기로 말미암아 양극화가 첨예해지고 개혁주의 세력이 가장 먼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셋째, 혁명적 좌파 조직이 존재하고 이들이 운동에 잘 개입한다면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통탄할 일이기도 '유신 공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한국 민중의 눈에 유럽 노동계급의 강력한 투쟁은 어찌 보면 커다란 영감은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떡'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조장부터 강경한 태도로 운동을 탄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계급은 오래지 않아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성장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혀들던 이명박 정부 초기와 달리, 지금은 박근혜마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입에 달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 노동운동은 조직과 의식이 견재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의 고통을 99퍼센트에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만만찮은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이 일어나듯 말이다.

이명박 집권 초에 있었던 극좌파들의 조직적 행동들이 이후 촛불항쟁이 일어나는 데 발판 구실을 한 것처럼, 한국의 혁명적 좌파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차승일



북한 로켓을 빌미로 한 MD(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는 긴장만 더 키울 뿐이다.

은 북한 로켓 발사를 중국을 직접 압박할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미 의회는 이번 에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에 로켓 발사 운반 차량을 수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내용도 포함될 듯하다.

이런 시도들이 중국의 반발 등으로 동

아시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제재와 호전적 조치들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북한 지배자들이 '괴물'이라면, 그 '괴물'을 만든 '악마'는 바로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의 압박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파는 대선 정국에서 북한 로켓 문제를 어떻게든 유리하게 써먹으려 했다. 이명박은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 운운했고, 박근혜는 '3차 핵실험이 예고된다'며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색깔론을 들먹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자유주의 언론은 또다시 이런 보수파들의 논리와 압박에 타협했다. 그래서 '안보 무능' 논리로 이명박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제재의 강화는 불가피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그 점에서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의 일부조차 제국주의라는 이 문제의 핵심 원인과 책임을 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다.

한반도 평화 실현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긴장 고조 행위와 대북 제재 등에 맞서야만 가능하다. 진보진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불안정을 키우는 제국주의에 맞서며, 남한 지배자들의 친제국주의적 정책에도 반대하는 아래로부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김영익

제국주의 — 동아시아에서 고조된 긴장과 갈등

지난 2~3년간 동아시아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증대했지만, 특히 2012년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크게 겪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수십 년간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미국 패권의 잠재적 도전자로 떠오른 것과 관련 있다. 경제성장 덕분에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수년 전부터 급격히 커졌다. 2000년대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크게 늘었고, 중국 경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화 획득 원천과 시장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정도로 커졌다.

자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려는 중국 지배자들의 외교적·군사적 노력도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위협이 됐다. 예컨대 중국이 남중국해 무역로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은 미국의 해상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전통적으로 유라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위협할 경쟁국의 부상을 경계해 왔는데, 지금 중국이 바로 그런 국가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 속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환율을 둘러싸고 심각한 경제적 갈등을 벌이기 시작했다. 즉,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1기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부터 중국의 부상을 겨냥해 역량을 재배치해 왔다. 즉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과잉 확장"돼 있는 군대의 규모를 조정하고 외교적·군사적 힘을 부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 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도 매우 중요한 해상 무역로며,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긴장하는 주변 국가들에 보호막을 제공하며 동맹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012년에 나타난 여러 분쟁의 바탕

이 됐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MD 체제를 구축하는 등 일본, 한국, 호주 등 기존 동맹국들을 긴밀히 묶어 뒀다. 그리고 인도와 군사 협력 수준을 높이려 애쓰며 필리핀, 베트남 등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갔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견제하려고 이 국가들의 기지를 이용하고, 현지 연합 훈련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 지배자들도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맞섰다. 중국은 4월 22~27일 서해에서 러시아와 함께 최초의 공식 연합 해상훈련을 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펼쳤다. 항공모함을 진수하고, 신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비를 증강했다.

이처럼 점차 고조하던 중미 갈등은 결국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심각한 영유권 분쟁을 촉발시켰다. 4월 초 남중국해 황옌다오(스카보려 섬)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감시선들이 어업 감시와 단속을 놓고 2개월간 대치했다.

화약고

이 대치는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더 악화했다. 한참 해상 대치 중인 4월 16~27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함께 대규모 해상 훈련을 했다.

여름에는 동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이 긴장이 결정적으로 고조된 것은 9월 10일 일본 정부의 다오위다오 국유화 발표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난 국치일을 코앞에 두고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격분했다. 전국 각지에서 반일 시위가 분출했다.

중국 정부는 다오위다오를 영해기선이라고 발표했고, 지금까지도 일본과 중국은 다오위다오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빈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다오위다오 분쟁에서 한결같이 일본을 지지했다.

이런 갈등은 한반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오바마 정권은 전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적극 활용했다. 한미일 지배자들이 북한을 빌미 삼아 호전적 조치들을 취하자, 이에 압박받은 북한 지배자들은 올해 두 차례 로켓 발사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때문에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커졌고, 동아시아 곳곳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동아시아는 점차 '화약고'가 되고 있다.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에도 이 지역은 매우 높은 속도로 군비가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도 미국 경제는 크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국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중국 지배자들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지만,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게다가 유로존 위기 등 세계경제 전체가 다시 심각한 위기로 갈 상황에서 이 두 국가가 '나눠 먹을 파이'가 점차 줄어드는 형세다.

따라서 내년에도 중미 관계에서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이 결합하는 양상은 더 발전할 듯하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고 동맹 관계 구축과 이간질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곳곳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 지배자들의 야심도 동아시아 불안정 증대에 일조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인도 같은 지역 강대국들도 외교 책략과 군비 증강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지역의 앞날에는 영유권 분쟁, MD 구축과 맞대응 등 여러 불씨가 놓여 있다. 그래서 지배자들의 각축전 속에 발달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차 커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동아시아 불안정의 뿌리인 제국주의와 그 갈등의 양상을 자세히 추적하며, 2013년에도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의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김영익



아랍 혁명 발발 2주년

튀니지에서 가자 지구까지

김종환

12월 17일은 북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튀니지에서 26살 청년 부아지지가 노신한 지 2주년 되는 날이었다. 그의 죽음은 튀니지 민중이 투쟁에 나서게 했고, 23년간 호령한 독재자 벤 알리를 끌어내렸다.

튀니지 혁명에 영감을 받아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연쇄적으로 혁명이 벌어졌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아랍의 봄'을 자임한 이집트에서는 30년을 철권통치한 무바라크 정권이 18일 만에 무너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리비아, 예멘에서는 독재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거나 외국으로 쫓겨났다. 시리아 민중은 맨주먹으로 혁명을 시작해 21개월 동안 싸운 결과 수도 탈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나라들은 모두 30~40년 동안 독재에 시달렸다.

친미왕정이 다스리고 있고 미국 제5함대의 근거지인 바레인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이 밖에도 '아랍의 봄' 기군에 쿠웨이트, 요르단, 모로코, 알제리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처럼 혁명이 삼시간에 이웃 나라로 확산된 것은 아랍 전역에서 민중이 겪는

고통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극단적인 양극화와 청년 실업, 억압적인 독재 정부와 이를 지탱하는 국가 폭력에 시달렸다.

2008년에 본격화한 세계경제 위기가 양극화와 실업을 더 악화시켰고, 엄청난 값싼 석유로 식량 등의 물가가 오르면서 더는 참을 수 없게 됐다. 사람들은 오랜 두려움을 떨치고 싸움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에서 혁명이 성공하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른 나라로 번져 나갔다.

혁명이 발발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아랍 민중은 계속 싸우고 있다.

최근 이집트인들은 새 정부에 반대해 수십만 명이 전국적인 시위를 연거푸 벌였다. 현재 이집트에서는 새 헌법을 결정하지 않고 파업을 이유로 활동가들을 구속·고문하자, 노동자들은 이 정부에 등을 돌렸다.

12월 초 튀니지에서도 계속된 실업과 빈곤, 혁명 전과 똑같은 국가 폭력 때문에 벌어진 시위가 삼시간에 주변 도시로 확산됐다. 대통령은 12월 17일 혁명 기념행사 도중 돌세례를 맞아 황급히 피신하는 수모를 겪었다.

리비아는 서방의 간섭 속에 정부를 구성했지만, 혁명의 중심지였던 뱅가지에 서 미 대사와 치안 책임자가 잇따라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 요르단에서는 연료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수십만 규모로 발전해 왕정을 위협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 레바논, 수단에서도 정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주류 언론은 이처럼 아랍에서 투쟁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 "부족과 종파 간 분열", "보수적 이슬람주의" 때문이라고 치부한다. 여기에는 아랍 정치의 후진성을 강조하고, 아랍인들이 서방의 자유시장 제도와 이권바 '국제 사회의 질서'를 받아들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아랍 전체의 축소판' 이집트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독재자 퇴진 같은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몇 년에 걸친 과정을 겪으며 발전한다. 지난 2년은 아랍 민중이 자신의 대안을 실험하고, 지배계급이 견제기만 양보한 현실을 간파해 더 근본적인 혁명으로 나아가길 길을 찾는 기간이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준 것은 '아랍 전체의 축소판'이라는 이집트다. 이집트 민중은 지난 2년 동안 반혁명적 장벽을 거

지난 2년 동안 아랍 민중은 빈곤과 국가 폭력을 몰아내고, 모든 종교와 종파, 부족이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 잠재력을 보여 줬다.

습 넘어며 급진화했다.

이집트인들은 혁명 직후 군부가 "혁명의 수호자"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군부는 전체 산업의 20퍼센트를 소유하고 독재를 지탱했던 자들이다. 결국 군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혁명가들을 수차례 학살했고, 이 때문에 군부의 위신이 드러났다. 군부는 또 혁명가들을 고립시키고 콥트 교파와 이슬람 사이의 종단 간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 결과, 이슬람주의 정치운동 단체들이 수십 년간 군부의 탄압을 받은 무슬림 행태단이 집권했다. 2012년 6월에 선출된 무슬림행태단 출신 대통령 무르시는 초기에 80퍼센트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

다. 불과 반연 전의 일이다.

그러나 무슬림행태단 지도부는 지배계급에 도전하는 대신 그 일부가 돼, '치안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이집트'를 만들려고 한다. 최근 그들이 기업가와 군부에 많은 권한을 주는 헌법안을 '날치기'하고 국민투표를 강행한 까닭이다.

현재 반정부 시위대는 "무르시가 혁명을 훔쳐 갔다"며 형식적인 민주화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 노동조합 권리, 복지, 사회 정의 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튀니지 민중도 독재 시절 탄압받던 이슬람주의 정당을 정부로 선출했으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 폭력이 계속되자 실질적인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다시 싸우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시위대가 왕정 타도를 외치고 있다. 1970년 요르단 군대가 팔레스타인 게릴라 수만 명을 학살한 이후 유지된 금기가 깨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아랍 민중은 빈곤과 국가 폭력을 몰아내고, 모든 종교와 종파, 부족이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 잠재력을 보여 줬다. 그 잠재력은 노동계급의 주도 하에 민주주의적 요구를 성취하며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연속혁명으로 발전할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혁명을 밀어붙이며 거듭 급진화한 아랍 민중 2012년 2월 군부에 반대하는 이집트인들의 시위

중동에서 흔들리는 제국주의의 위신

제국주의 열강, 특히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아랍의 독재 정부들을 후원해 왔다. 중동의 석유가 남미나 과거 미국 본토의 석유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워 관리·통제해 왔다.

그동안 미국은 이집트 군부에 해마다 13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지원해 왔다. 또 '아랍의 봄' 당시 바레인과 예멘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자신의 '롤라나'들을 지키려고 반혁명을 지지했고, 필요하면 다른 친미국가에서 군대를 보내 시위를 탄압했다. 시리아 혁명 초기 기업가들이 포진해 있는 무슬림행태단이 이런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할 리 만무하다.

오늘날 아랍 노동계급은 "혁명을 완성"한다며 IMF의 돈과 긴축 정책을 받아들이려는 이집트 정부, "실업을 낮출 요술 지팡이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튀니지 대통령 등을 인정하며 혁명을 멈출 이유가 없다.

지난 11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침공 실패는 아랍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추락한 위신을 특출히 보여줬다. 이집트는 이전처럼 이스라엘에 협력하기는커녕, 일시적으로 가자 지구 봉쇄를 풀고 이스라엘에 굴욕적 휴전을 종용했다. 아라로부터 압력에 떠밀린 이집트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편드는 것이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인 학살 전과가 있는 요르단 왕정은, 자신의 지배를 뒤흔드는 국내 반정부 시위가 더 커질까 봐 '이스라엘 좀 말려보라'고 힐러리에게 애원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동맹국 터키마저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고 비난했다. 경비전 이스라엘의 주인 미국은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자살군 투입 계획을 접고 휴전할 수밖에 없었다.

팔레스타인

당시에 아랍 혁명은 반제국주의를 자처한 독재자들의 가면도 벗겼는데, 시리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스라엘과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다며 중화기로 무장해 온 시리아 군대는 지난 21개월 동안 자국민 4만 명을 학살했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혁명을 지지하자 전투기로 난민촌을 폭격했다.

한편, 서방은 끈질기게 혁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든다. "화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리비아 혁명이 미사일을 퍼부으며 개입했고, 그 결과 서방의 앞잡이와 이에 타협한 자들이 현재의 리비아 정부를 구성했다. 정부가

마지막 혁명 세력한테 무기를 회수하려고 시도하면서 충돌도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도 비슷한 노름수를 뒀으나 앞잡이를 자처한 시리아국가위원회(SNC)의 무능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이미 시리아 전체가 혁명군에게 기온 지금도, 미국은 혁명세력 일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해 분열시키려 했다.

아랍 혁명의 진정한 승리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아랍인 스스로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방의 개입을 한사코 반대해야 한다.



아베의 집권에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일본 반핵 운동 12월 8일 일본 반핵 시위대가 빗속을 뚫고 가리를 행진하고 있다.

일본 총선 평가

민주당 배신의 득을 본 아베의 불안한 앞날

12월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수 의석(총 4백80석에서 2백94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오르게 됐다.

아베 신조는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로서, 보수 반동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다.

아베는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전권 포기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군대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국이 직접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무력 개입할 수 있는 '집단지위권'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세기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침략, 그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지난 총리 시절에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통행으로 남는다"고 하는 등 극우적 본색도 숨기지 않았다.

아베의 이런 주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지배계급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그는 2006~07년 재임 시절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강행 통과, 애국심 교육을 내건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일본의 재무장에 필요한 조처들을 도입한 바 있다.

자민당은 31석을 얻은 공명당과 연합할 경우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 참의원 부결정을 제가결할 수 있고, 개헌안도 발의할 수 있다. 54석을 얻어 제3당으로 떠오른 일본유신회와 힘을 합치면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일본유신회 대표 이시하라 신타로를 공명연혁 후보장을 주장하는 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일본 공적 정치는 우경화를 우려 섞임 눈으로 바라 보고 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찬찬히 뜯어 보면, 자민당이 결코 득의양양할 처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자민당의 암습"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그림은 '민주당의 참패'와 그에 따른 '자민당의 어부지리'다.

2009년 민주당은 '탈미입미脫米入亞'(대미 중사에서 벗어나 아시아 관계를 우선선함), 오키나와 후텐바 미군기지를 단키나와 밖으로 이전, 중세 없는 복지 등을 내걸며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열망을 등에 업고 '55년 체제'(1955년부터 시작된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를 무너뜨렸지만, 지난 3년간 이런 변화 열망을 철저히 배신했다.

투표 결과를 찬찬히 뜯어 보면, 자민당이 결코 득의양양할 처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자민당의 암습"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그림은 '민주당의 참패'와 그에 따른 '자민당의 어부지리'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사람들의 분노를 키웠다. 게다가 민주당 정부는 이런 재앙을 보고서도 핵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총선 전 의석 수(2백30석)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7석을 얻었다.

자민당은 이번 민주당의 실패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은 것뿐이다. 마치 2007년 한국에서 '이명박 당선'의 1등 공신은 노무현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아베 전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일본의 재무장에 필요한 조처들을 도입한 바 있다.

자민당은 31석을 얻은 공명당과 연합할 경우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 참의원 부결정을 제가결할 수 있고, 개헌안도 발의할 수 있다. 54석을 얻어 제3당으로 떠오른 일본유신회와 힘을 합치면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일본유신회 대표 이시하라 신타로를 공명연혁 후보장을 주장하는 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일본 공적 정치는 우경화를 우려 섞임 눈으로 바라 보고 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찬찬히 뜯어 보면, 자민당이 결코 득의양양할 처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자민당의 암습"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그림은 '민주당의 참패'와 그에 따른 '자민당의 어부지리'다.

2009년 민주당은 '탈미입미脫米入亞'(대미 중사에서 벗어나 아시아 관계를 우선선함), 오키나와 후텐바 미군기지를 단키나와 밖으로 이전, 중세 없는 복지 등을 내걸며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열망을 등에 업고 '55년 체제'(1955년부터 시작된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를 무너뜨렸지만, 지난 3년간 이런 변화 열망을 철저히 배신했다.

주당의 배신에 실망한 사람들이 아베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민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뿐이라는 얘기가.

이 때문에 일본의 보수언론들조차 자민당에게 "자민당이 말고 겸허히 행동하라"며 충고하고 "일본이 우경화된 게 아니라 국화만 우경화됐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다수가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반 대중 사이에서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찬성(40.9퍼센트)과 반대(41.4퍼센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도쿄신문》). 자민당 의원 대다수가 핵발전소 추진파이지만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반핵 여론이 높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탈원전 세력'이 참패했다고 보도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탈원전'을 전면에 내세운 일본 비례당이 대거 낙선한 것은 탈원전을 세세위서가 아니라, 이들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밑을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2030년 대까지 원전 재료를 말하면 서도 집권 중에 핵발전소를 재가동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반핵 운동의 목소리를 선거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듯하다. 예컨대, 반핵 NGO들의 지지를 받아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약 97만 표(15퍼센트)를 얻어 2위를 했다. 일본 반핵 운동 단체인 '모든 원전을 지금 당장 없애!' 전국회의(NAZEN)도 스기나미구에서 후보를 냈는데, 이시하라 신타로의 아들 이자 이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이시하라 노부테루에 맞서 25퍼센트(2위)를 득표하기도 했다.

물론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자유주의 세력의 무능으로 침체한 정치적 양극화가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가 설득력 있는 정치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일본유신회와 같은 극우파 표표리즘 세력이 정치적 공백을 메울 수도 있음을 보여 줬다.

아베 정부는 매우 불안정한 정부가 될 듯하다. 아베는 헌법 개정이나 핵발전소 재가동 등을 추진할 테지만, 이것은 대중의 저항을 부를 수 있고 아베 정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세계경제 상황도 아베 정부에 악재다. 아베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양적 완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13년 세계경제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현주

아랍 혁명 일지

튀니지 2010년 12월 17일 부아지지 분신	튀니지 2011년 1월 14일 독재자 벤 알리 퇴출	이집트 2011년 1월 25일 타흐리르 광장 점거 투쟁 시작	이집트 2011년 2월 11일 독재자 무바라크 퇴출	시리아 2011년 3월 15일 '분노의 날' 시위 성공	리비아 2011년 3월 19일 나토의 리비아 공습 시작	리비아 2011년 10월 20일 독재자 카다피 사망	이집트 2012년 여름 무르시 당선 후 노동자 파업 몰결	아랍 전역 2012년 9월 11일 영화 <순진한 무슬림> 항의 시위	이스라엘 2012년 11월 14일~21일 가자 지구 침공 실패	시리아 2012년 12월 아사드 정권 몰락 암박?
---	--	---	--	--	--	--	---	---	--	---

다시 듣는 맑시즘2012 ③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복지 확대를 이를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은 2012년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 주최로 열린 한국 최대 진보포럼 ‘맑시즘2012’에서 한 연설을 녹취·축약한 것이다.

복지국가 논의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씨 같은 경우, ‘사람이 먼저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를 내세웠죠.

박근혜 씨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걸어요. 박근혜식 꿈이 이뤄지면 참 큰 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중 있게 제시한 것이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형 복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우리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는 것은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에요. 그나마 박정희가 1977년에 건강보험을 도입하기는 했죠.

그런데 박정희가 왜 건강보험을 도입했을까요? 박정희가 1961년 5·16 때 의료보험 도입을 말했지만,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1977년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요즘 빈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요즘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여기에 학생들의 움직임까지 덧붙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

딱 놀려 왔던 한국의 노동자 운동이 1975~76년부터 꿈틀거렸습니다. 그 이전의 열 배 이상 되는 분규가 발생하는 등 노동운동이 급격하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학생운동이 10월 유신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권한텐] 이 둘이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큰 공포였고, 이를 막기 위해 뭐라도 먹고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치권의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건강보험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노동자들 돈 반, 기업가들 돈 반, 이렇게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최초의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이것도 5백 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등만 보장했고 또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50퍼센트도 안 됐습니다.

이것을 전 국민이 적용받는 현재의 건강보험으로 만든 것은, 박정희가 죽고 나서 한참 뒤인 1989년이었습니다. 1987년의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건강보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박정희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결합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주 기형적인, 부분적인 건강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조차 살아남을 제도로 만든 것은 노동자와 민중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그렇게 걱정하던 노동자 운동과 학생운동의 결합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게 바로 부마항쟁이죠.

보수파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비스마르크다’ 하고도 설명합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1884년에 제국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만일 사회민주당(독일 공산당의 전신, 지금 독일 사민당의 전신이기도 한)이 없었다면,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사회개혁의 진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급진적 투쟁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두려운 문제로 등장했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12월 8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스마르크 개혁의 실체입니다.

비스마르크가 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1864년에 제1인터내셔널이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혁명과 봉기가 터졌습니다. 그 정점이 1871년에 최초로 노동자들이 직접 권력을 장악했던 프랑스 파리로웠었습니다.

파리코뮌

이 프랑스 혁명이 독일에까지 불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즉 노동자 혁명이 전 유럽을 휩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나 비스마르크 같은 보수파들이 사회보험제도나 사회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어떨 때냐? 노동자들이 체제를 뒤흔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람시는 이것을 ‘수동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그 전인 1871년 파리코뮌 때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실시한 정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중 제가 기억하는 것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저로서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집세 면제’였습니다. 그것도 밀린 집세까지 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월

세가 밀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야노동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에선 아직도 못 하는 것을 1871년에 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했나요?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노동자들이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하면서 무상 교육을 실시했죠. 모든 교회를 징벌해서 정치집회장으로 사용했고 일부 시설에서는 무상의료를 시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파리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코뮌 위원들은 노동자 임금만 받았고, 모든 군대는 노동자들의 군대로 대체됐죠.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했습니다. 코뮌 기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거나 집 밖에 나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파리코뮌 정부가 바리케이드를 쌓고 저항할 수 있던 힘이었습니다.

유럽 모든 나라 지배자들은 유럽 전체로 파리코뮌이 번져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스마르크는 파리코뮌에서 시행했던 것을 일정하게 베껴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가가 책임지는 게 적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정부의 부담이 적고, 노동자들과 기업주들이 비용을 반씩 내는 형태의 제도를 보유하고 있죠.

소비에트 러시아

파리코뮌 외에 우리가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국가 단위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시행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였습니다. 노동자 국가, 소비에트 러시아가 시행했던 사회복지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복지 제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 실업수당 등 모든 제도가 소비에트에서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개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탁아소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정부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 공동 빨래를 하고 식사도 다 같이 하는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속웃이

너무 뒤섞이는 관계로 공동 빨래제가 폐지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90퍼센트에 가깝던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했습니다. 양성 평등을 주장하면서 혁명가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소비에트 혁명이 성공한 후에 진정으로 근대적인 복지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선 NHS(국민보건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런던 올림픽 때 영국 정부가 자랑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터팬, 해리포터 같은 아동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NHS였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3백20개의 병상이 등장했는데, 애들이 그 위에서 뛰고, 실제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영국의 무상의료 제도가 아주 저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파키스탄 의사들만 많다’는 인종차별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NHS는 완전무결한 제도도 아니고, 영국 정부가 복지재정을 계속 삭감하는 바람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위정자들이나 우파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고 하는 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NHS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 노동당이 도입한 것입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노동운동이 전후에 급진화하면서, 유럽 전체에서 매우 급격한 사회개혁이 있었죠.

던컨 핼러스(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쓴 책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던컨 핼러스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리버풀에 있는 조그만 극장에서 고전적 반전영화인 〈서부전선 이상없다〉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의 이야긴데, 독일 병사 두 명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장군들하고 정치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게 나았을 걸 그랬어’ 하는 장면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퇴역 군인이 다수 섞여 있었을 청중석에서 곧바로 큰 박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참전 군인의 92퍼센트가 노동당을 찍었

박정희는 건강보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박정희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결합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주 기형적인, 부분적인 건강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조차 살아남을 제도로 만든 것은 노동자와 민중이었습니다.

을 정도로 급진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동당은 ‘국유화가 사회주의로 가는 주요한 교두보’라고 주장하면서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고, 병원들을 다 국유화했습니다. 이렇게 NHS의 기반을 쌓은 것이죠.

당시 의사들은 반대했습니다. 보수당은 더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지지가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렇게 성공한 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그나마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라는 장애인·노인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민권운동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개혁은 실제로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1백 년 만의 개혁”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보수파들의 반대로, 케네디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려다 실패했고, 클린턴이 도입하려다 실패했고, 오바마가 도입하려다가 겨우 뭇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도입하려는 의료개혁이 뭐죠? 그것은, 국가가 권장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민영 의료보험과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을 경쟁적으로 내걸자는 것이죠. 이것은 1960년대 공화당의 닉슨이 내걸었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과 유럽과 다른 점은 뭘까요?

예전엔 미국의 노동운동만큼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화됐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 계급은 민주당의 왼쪽 방을 선택했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된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역사적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복지 하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늦게 복지제도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가장 늦게 복지를 도입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나 도입했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유럽에서 복지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스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면, 유럽 사람들이 다 웃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지를 많이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로 끌고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거짓말입니다. ‘복지가 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주장도 워낙 말이 안 되죠.

보수파들은 ‘복지 하려면 너네들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래도

▶ 11면으로 이어짐

중간평가와 전망

박근혜 시대에도 지속될 현대차 비정규직의 저항

박근혜가 당선한 직후(12월 21일)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네 시간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벌이며, 정몽구 일당의 신규채용 꿈수와 폭력에 맞서 투쟁했다.

사측은 관리자와 용역을 동원해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을 납치하고 폭력을 휘둘렀지만, 조합원들이 집중한 1공장과 2공장의 라인을 부분적으로 멈추며 투지를 보여 줬다.

그럼에도 현대차 사측은 신규채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를 무시하며, 신규채용 인원은 5백 명 늘리고 시행시기는 2016년까지 연장하겠다는 “2차 쓰레기안”을 내놔다.

12월 14일, 사측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던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그리고 최근 3천27명이 신규채용에 응했다고 발표했다.(사측 소식지 <함께가는 길>)

비정규직지회 소식지를 보면, 사측은 “신규채용 원서를 받으면서 업체권리 포기 각서, 소송 포기 각서, 조합 탈퇴서 따위를 같이 받고 있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정대위 소식지).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신규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저항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사측은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 탄압도 강화했다. 12월 14일엔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빗발아 30여 명이 치료를 받았고, 12월 21일에도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사실상 여론의 눈치를 보며 웅크리고 있던 사측이 12월 13일부터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무엇보다 사측은 '1퍼센트'의 대변인 박근혜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4월 총선 직후 내놓은 첫 번째 입법안은 “정몽구보호법”이라고 비판받은 ‘사내하도급법’이기도 하다.



박근혜 당선 이후 정몽구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우리가 더 크게 단결하면 맞설 수 있다.

한편, 대체인력 저지 투쟁은 생산에 타격을 입히며 효과적으로 투지를 보여 줬지만, 11월 29일(2시간), 12월 5일(2시간), 12월 14일(4시간) 등 일주일 간격으로 벌어지면서 더 강력한 압박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초기 파업이 성공했을 때 조합원들의 참가율과 자신감이 매우 높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더 집중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으면 좀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당시 정규직 활동가와 대의원들의 지지·연대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실천에서 보여 준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한 1공장 정규직 사업부위원회는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빈틈 많은 대체인력 저지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투쟁이 더 강력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리파’ 정규직 ‘현장 조직’이 빈틈을 파고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내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비현실적인 요구와 투쟁에 휘둘리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현장 조직’ 소속 대의원들은 연대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중재”를 자처하며 비정규직 투쟁을 억누르는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할 때, 다가올 주간연속2대제 시행을 둘러싼 투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옳다.

전망과 대안

정몽구 일당은 박근혜 당선으로 한숨 돌리며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지는 못한다.

<조선일보>조차 사실에서 지적했듯이, “대기업의 경기가 좋아지면 ... 그 효과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퍼져 간다는 이른바 ‘낙수(落水)효과’는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최대 순이익을 갱신하고 있는 정몽구는 ‘법을 지키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꿈수와 억압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높았다.

현대차에는 커다란 힘과 잠재력을 가진 잘 조직된 노조가 있고, 굴곡은 있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10여 년간 때로 전국을 흔들며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켜 왔다.

대선 결과가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기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쉽게 사그라들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정몽구 측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요구가 필요하며 부적절한 타협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 때일수록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현대차를 넘어 전국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단결할 수 있는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연대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시 투쟁의 기운을 복돋는 데서 금속노조의 구실도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1월 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부대인 금속노조가, 특히 현대차지부가 1월에 성공적인 투쟁을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가능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런 전통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쟁의 기운을 복돋는 데서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조직도 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작업장에 발을 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 정치 상황 속에서 투쟁을 조망하고 전망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투쟁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수영 노동자연대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 10면에서 이어짐

할래?’ 하고도 말합니다. <조선일보>는 ‘사회보험 제도를 다 하려면 1백조 원쯤 든다고 했습니다.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요? 1백조 원이 든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수치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논의에서, 저들이 맨날 빼먹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 분배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 봅시다. [유럽의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받는 돈(임금)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랑 유럽이랑 GDP에서 가져오는 노동의 몫을 비교하면, 우리 나라 노동분배율이 다른 나라보다 10~15퍼센트 낮습니다. GDP의 10퍼센트면 얼마입니까? 1백20조 원 정도죠. 한국 노동자들은 이른바 ‘유럽의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1백20조 원에서 1백80조 원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노동자들에게 1백20조 원을 주고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다 할 테니까, 물론 과장된 수치이지만, 1백조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보다 20조 원을 더 주는 건데.

그런데 이런 분배 자체를 빼먹고, ‘너네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 폭탄일 뿐이죠.

사실, 한국 노동자들이 내는 사회보장 기여분은 이미 유럽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기업들의 기여가 낮죠.

즉,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느냐? 자본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

본·부자에게 세금을, 서민·노동자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는 정당합니다. 복지국가는 그런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야죠.

‘서로 조금씩 도와 계(契) 타자’ 하는 식으로 복지국가를 말해선 안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을 쓴 분도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국가가 좀 내고, 기업이 좀 내고, 노동자·서민이 좀 내서 복지국가를 이루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지국가와 ‘계’를 착각하는 논리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노동자들더러 돈 더 내라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내나요? 내야야 낼 게 없습니다. 돈을 좀 더 내면 난 만큼 좀 더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복지제도가 이뤄진 적이 없어요. 복지제도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아름다운 연대 정신”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독일의 이른바 ‘철혈 재상’, 모든 자유를 피와 칼로 무찔러서 권력을 얻은 비스마르크조차 말했던 것처럼,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거대한 노동자 계급의 운동과 혁명, 이런 것이 한 대륙을 휩쓸고 지나갈 때 사회복지 제도가 이뤄졌습니다.

10월 혁명의 노동자 투쟁 속에서 복지제도가 출현했습니다. 영국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무상의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소한의 건강보험 제도조차 온 국민이 거리로 나오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녹취·정리 이슬기

정리 발언

나온 질문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백만 원 상한제’는 유럽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본뜬 것인데, 독일의 경우 진료비가 자기 소득의 2퍼센트 이상 초과하면 정부가 돈을 내줍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대체로 평균임금의 2~5퍼센트가 상한선입니다. 이것을 한국에 맞춰 노동자 평균 임금의 3~4퍼센트로 계산하면, 대략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백만 원 상한제’가 나왔습니다.

우파들은 이 제도에 반대합니다. 진료비가 1백만 원 이상 나오면 돈을 더 이상 안내도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병원에 갈 것이라는 논리를 대죠.

그러나 맹장염 수술을 아무리 더 받고 싶어도, 맹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짜면 계속 치료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틀린 거죠. 게다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재벌들이 감옥에 가면 병원에 자주 가고 싶어 하기는 하죠. 감옥만 가면 휠체어 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백만 원 상한제’는 사실 명확한 의미에서 무상의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등은 “무상의료는 공짜 의료가 아니다” 하고 설명하

지만, 무상의료는 말뜻 그대로 ‘돈 안내고 치료받는 의료’입니다.

국가가 사회복지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4년 동안 부자 감세한 돈이 90조 원가량 되고 4대강에만 22조 원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사내보유금만 해도 3백40조 원입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숨겨 뒀을 테지만, 어쨌든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이 돈이면 무상복지를 시행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어떤 분이, [기업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자본이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세계화 시대니까.

과장된 세계화론

그런데 이런 말들은 대부분 헐박입니다. 최소한 공장을 뜯어서 옮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본은 국적을 안 가진다는 의미에서 ‘다국적 기업’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도요타가 아무리 어떻게 해 봐도 미국으로 국적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자본은 국가를 활용하고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려면, 국가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자본의 이동이 너무나 자유롭다’는 얘기는 헐박이

고 과장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계화 시대에는 [국적을 초월해] 노동자 간의 연대가 확대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가 아랍에서 일어난 혁명 소식을 SNS를 통해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자본주의하에서 복지제도조차 아주 첨예한 투쟁과 혁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 그런 복지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랍혁명을 보고 있고, 유럽 노동자들의 반란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즉 우리의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집세를 낮춰 달라고 하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해 달라고 하고 돈이 없어도 아프면 치료받게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여러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낳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더는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이윤보다 우선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무지개 속의 적색 —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②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레프트21〉은 성소수자 해방 운동에 연대하며 성소수자 해방의 쟁점을 연재한다. 세 차례 연재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고, 억압의 뿌리를 파헤치고, 성소수자 해방의 전망을 다룬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진 않았다. 오히려 인류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시기에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용인됐다.

어떤 사회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가 규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단지 몇몇 성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체성이나 성지향을 가진 사람의 집단을 고정적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들어서였다. ‘동성애자’라는 말 자체가 처음 생긴 것이 1869년이다.

초기 인류 사회의 생활방식이 남아 있는 공동체들에서 동성애가 억압받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존재한다. 가령,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성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다른 성의 행동을 선호하는 남성과 여성은 그가 원하는 성역할로 바꿀 수 있었고, 동성과의 성관계나 결혼도 용인됐다. 유럽 식민지배자들은 북아메리카에 처음 상륙했을 때 ‘여성처럼’ 행동하면서 남성과 결혼한 남성들을 발견했고, 이들이 그 공동체에서 높게 평가됐다고 기록했다. 또, “두 개의 영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식민 지배 이전 라틴 아메리카 여러 문명들에서 발견됐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절에도 남성 간 사랑을 찬양한 예술 작품들이 풍부하다. 철학자 플라톤은 남성 간의 사랑을 “천상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동성 간 사랑이 평범한 삶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수많은 이슬람의 예술, 문학, 설화, 시가 있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 지역의 다양한 얘기를 묶어놓은 《천일야화》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이전 계급사회들도 성이 해방된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노예와 여성에 대한 지독한 차별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여성 간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10대 소년과 성인 남성 간의 성행위가 용인됐지만, 그 사회의 성역할과 위계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랬다. 그래서 “능동적” 남성과 “수동적” 소년 간에 적절한 나이 차가 있어야 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단지 주인의 재산일 뿐이었고 노예 강간이 허용됐다.

중세 ‘가톨릭의 시대’는 어땠을까? 가톨릭 성서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동성애 혐오와는 달랐다. ‘방탕한’ 특정 행위가 비난받은 것이지, 특수한 인간 유형이 비난받았던 게 아니다. 게다가 이성 간의 오컬섹스나 항문성교, 피임, 낙태 등 생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든 성행위가 비난받았다.

중세에도 시기에 따라 억압의 정도는 달랐다. 로마제국이 무너진 직후 동성관계에 대한 특별한 박해는 없었으며, 이런 느슨한 완화기는 몇 세기 더 지속됐다. 8세기 무렵부터 12세기까지 서유럽에서 동성관계에 대한 특별한 반발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 동안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동성들 사이의 다정한 관계가 피어올랐다. 가톨릭 역사가들은 그것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만일 당시 사회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감이 있었다면 이것을 너그럽게 봐 주진 않았을 것이다.

“천상의 사랑”

이런 사실들은 동성애 억압이 인류 사회에서 필연적인 것도, 초역사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왜 어떤 시기에는 동성애 억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어떤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성에 대한 태도가 사회 체제의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봐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룬 가장 중요한 저작은 바로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년)이다. 엥겔스는 매우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한 극소수 중한 명이었다. 엥겔스는 이 책에서 여성 차별과 가족제도, 그에 따른 성 억압이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약 1만 년 전, 농업이 발전하기 전(인



《행복한 왕자》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와 그의 연인 알프레드 더글라스.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동성애를 변호한 오스카 와일드를 재판대에 올려 가족제도 확립을 위한 속죄양으로 삼았다.

류 역사의 95퍼센트가 넘는 기간)에 인류는 수렵·채집으로 생활했다. 이 시기에 여성이나 동성애는 지금처럼 차별받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인류학자들이 19~20세기까지 살아남은 수렵·채집 사회들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여성의 채집 활동으로 공동체 식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됐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목축을 이용한 농업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잉여 생산물 — 하루하루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들 — 과 함께 재산 축적 가능성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초기의 잉여는 극소수 지배계급 수준에 집중됐다.

이제 남성이 사회의 부를 대부분 생산

하는 형태 — 경작과 목축 — 로 바뀌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쟁기를 끌거나 소를 모는 일이 어린 아이들을 쫓 먹이고 돌보는 일과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렵·채집 사회의 특징이었던 자유로운 짝짓기와 집단적 육아 관행도 사라졌다. 남성이 우위를 점하는 배타적인 일부일체제 가족이 발전했다. 이런 가족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됐고, 하는 일도 집안일과 자신의 자녀만을 돌보는 것으로 국한됐다. 엥겔스는 이를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불렀다. 이 과정은 생산력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수립된 생산관계가 성 억압을 낳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에서 특정한 성이 억압받는 이유도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뿌리를 둔

가족제도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더는 가족은 생산의 단위가 아니다. 그러나 가족제도는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데서 여전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자본가 계급은 가족을 통해 그들이 착취하는 노동자들과 차세대 노동자들을 거의 공짜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성의 본분은 아이를 낳고 돌보는 일이라는 관념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은 가족에 대한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더 광범한 계급의 단결을 가로막는 협소한 보수적 세계관을 부추길 수 있다. 또, 가족제도를 통해 여성과 동성애자 등을 차별함으로써 이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착취하고, 노동계급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유지하고 분열하도록 부추긴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남성과 여성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성애적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들은 ‘정상 가족’을 뿌리째 뒤흔드는 악으로 여겨지고 체계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는 동성애 억압이 줄어들 여지도 만들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오래된 촌락 공동체가 붕괴했다. 젊은이들은 독자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대도시는 익명의 삶을 보장했다. 이 모든 것이 동성애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의 새로운 지배자들에게 성에 대한 제한이 훨씬 중요해졌다. 그들에게 여전히 견고한 가족제도가 필요했고, 가족은 재확립됐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일련의 억압적 법률을 만들고 본보기가 될 만한 법정 사건들을 동원해 모든 ‘비정상적’ 성애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과학’을 동원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퍼트렸다.

동성애 혐오와 차별은 인간 본성이 아니고, 차별을 통해 유지되는 계급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계를 폐지할 때만 성 억압도 없앨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투쟁과 성 해방의 전망을 다룰 것이다.

최미진

서평



“분노가 새로운 힘이 되게 하라”

2010년에 타계한 하워드 진은 뛰어난 역사가이자 저명한 저술가였고, 분노와 희망을 잃지 않는 투사이기도 했다. 한국 대선에 즈음해 나온 그의 저서 《왜 대통령들은 거짓말을 하는가?》는 전쟁과 빈곤,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억압과 파괴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노(老)투사의 초상을 생생히 보여 준다.

하워드 진이 미국의 진보 잡지 〈프로그레시브〉에 기고한 글을 묶은 이 책의 원제는 《역사에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The Historic Unfulfilled Promise)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 코소보 내전, 9·11, 21세기의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한 가운데서 그가 풀었던 주장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다.

미국 지배자들과 세계 자본주의가 저지르는 만행을 날카롭고 풍부하게 폭로하면서도 그의 글이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낙관 때문이다. 하워드 진은 뉴딜과

노예제 철폐 운동의 역사에 대해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당신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여전히 꿈꾸고 있군.’ 그렇다. 우리는 꿈꾸는 이들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며 평등한 사회를 바란다. 전쟁에 반대하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품격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꿈을 굳게 붙들고 나갈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현실 자체에 매몰돼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는 대책 없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복지, 민주주의, 예술, 대통령 탄핵, 선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급진화 시켰고 그가 한평생 진지하게 참여했던 전쟁 반대 문제 등에서 풍부한 사례들을 들며 날카롭게 논지를 전개한다.

짧은 글에서 당대의 쟁점과 역사적 논

의를 쉽게 전달하는 하워드 진의 글은 탁월하다. 그가 부시 재선 즈음에 쓴 ‘분노가 힘이 되게 하라’는, 박근혜 당선을 맞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듯하다.

부시 재선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새로운 힘으로 변모시켜 활용해야 한다. 이 분노와 낙담, 불만과 좌절 안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거대하게 잠재하고 있다.

“역사의 진보가 이뤄지고, 부당한 질서가 무너진 것은 … 정치인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행동했을 때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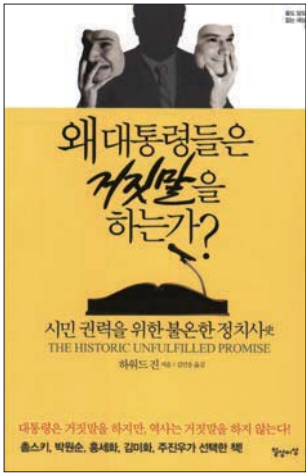
“비민주적인 선거의 한계에 더는 간하지 않고, 그동안 선거기간이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모든 힘을 기울여 펼칠 수 있다. … 부를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위해 쓰지 않고 전쟁으로 낭비하는 현실에 지쳐 있는 이 나라를 대대적으로 바꿀

변화가 올 것이다. …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보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지상의 나머지 인류와 공감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명쾌한 전망은 역경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진지하게 투쟁을 건설하는 투사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어느 광고 카피처럼, 무엇을 기대하든 하워드 진은 더 많은 교훈을 독자에게 선사할 것이다. 주류 정치가 수십 년 동안 보였던 위선과 정신 나간 행태에 대한 매서운 폭로, 지난 30여 년 동안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명쾌한 총평, 굴곡진 세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쟁을 외친 투사의 기개까지, 모든 면에서 이 책은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서가에 꼭 있어야 하는 책이다.

김인수



《왜 대통령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하워드 진 지음, 김민웅 옮김, 일상이상, 1만 6천 원, 3백20쪽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토대와 상부구조’로 세계를 해석하기

이번 대선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매우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자면, 경제 위기와 계급 투쟁이라는 ‘토대’의 상태가 ‘상부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에스텔 쿠치**가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마르크스의 비유를 소개하고, 그것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적 과정을 제시한다.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답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에 속한다.

마르크스의 저작을 살펴보자.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패턴을 찾아내려 애썼고, 1859년에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비유를 발전시켰다. 이 비유는 마르크스 철학의 핵심이 되는 사상을 설명해 준다.

마르크스는 “사회는 경제 구조가 법적·정치적 상부구조 형성에 필요한 진정한 바탕이 된다” 하고 썼다.

다시 말해, 흔히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예컨대 종교, 정치, 문화, 또 이것을 재생산하는 제도 등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들이 발 딛고 있는 기반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반이란 노동과 생산을 관장하는 경제를 말한다.

마르크스의 평생 동지이자 조력자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역사 이해에 기여한 바는, 찰스 다윈이 생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만큼이나 혁명적이었다’고 썼다.

그것은 바로 “지금껏 이데올로기의 과잉으로 은폐된 단순한 사실, 즉 인간은 무엇보다 먹고 마시고 의복과 주거지를 확보한 뒤에야 정치, 과학, 예술, 종교 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력 토대의 발전이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마르크스는 어떤 시기든 두 가지 요소, 즉 인류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또 계급 투쟁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관계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생산력이란 사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스위스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컴퓨터부터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냄비까지 온갖 것들이 생산력의 일부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생산력”의 나머지 일부는 자주 잊혀지곤 한다. 컴퓨터든 감자튀김 냄비든 노동하는 인간이 없으면 제 기능을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이야말로 생산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르크스는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고 축적되면서 생산력 또한 점차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식물을 쓰다 어느 날 갑자기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없듯, 이 과정은 결코 부드럽고 완만하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토대의 둘째 요소, 즉 생산관계가 부각된다.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예로 일하는지,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지, 사무실에서 일하는지가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 즉 노동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관계다.



경제 위기와 정치 양극화 경제적 토대에서 벌어지는 위기와 양극화는, 정치적 상부구조에서 파시즘(아래, 영국 파시스트 캠페들)과 노동자 국제주의(위, 유럽 공동 총파업)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수렵·채집 사회가 음식을 저장하고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즉, 인간 집단이 최초로 이동 생활을 청산하고 한곳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산 방식이 급격히 바뀌었다. 작물 생산량이 늘면서 잉여 생산물도 많아졌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왔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그 생산물을 통제하는 집단이 생겨났고, 오랜 시간이 흐

르며 사회가 계급으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으로 토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갈등이다. 생산력이 점차 발전하면서 기존의 생산관계와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생산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고무한다. 그러나 생산관계는 일정 시기 동안만 생산력을 자극할 뿐이다.

생산관계는 결국 혁신을 가로막거나

사회의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는 구실을 하게 된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 “생산관계가 족쇄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족쇄를 내던질 때, “사회 혁명의 시대가 열린다.”

그렇다면, 상부구조란 무엇인가? 주요 갈등이 토대에서 벌어진다면, 상부구조는 어떤 구실을 하는가? 몇몇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모든 일을 정치와 상관없이 경제로 환원해 버린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마르크스가 “맷돌이 우리에게 봉건 사회를 가져다 준 것처럼, 증기기관은 우리에게 산업 자본주의를 가져다 줬다”고 주장한 대목을 지적한다. 또 다른 이들은 상부구조가 토대를 “동결”시키고 사회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상부구조는 국가,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포괄한다. 이 요소들은 모두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자들의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토대가 사회적 갈등의 뿌리라면, 상부구조는 수없이 많은 모순들이 터져 나오는 영역이다. 즉, 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집약

마르크스가 주장했듯, “인간이 이 갈등을 인식하고 전투를 벌이는 과정은 이데올로기적 형태를 취한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정치는 경제의 집약된 표현”이라고 했다.

그래서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첨예한 정치 위기와 이데올로기 투쟁이 펼쳐지고, 혁명가들은 이 논쟁에 적극 뛰어들어 개입하곤 한다.

마르크스는 그 결과가 결정돼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옛 생산관계가 약화하다 특정 시점에 전복돼 버릴 수 있고,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반대로 기존 질서가 강력해서 무너지지 않고 도전자들을 물리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체제의 침체, 더 나아가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한때 안정적으로 보였던 선진 문명들이 거둬들여 무너졌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를 두고 “경쟁하는 계급의 공멸”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붕괴한 사회들을 돌아보며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웃기는 쉽다. 스스로 존재 수단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바로 그런 위협이다.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과 자원은 존재한다. 그러나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도록 추동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속가능한 삶을 어렵게 만든다. 전 세계 정치인들이 기후변화 회의에서 보이는 멍청한 짓거리들을 보라.

마르크스는 사회를 변화시킬 방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사회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진 지금,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마르크스의 비유는 여전히 우리가 쥔 무기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 이행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

마르크스의 분석을 잘 보여 주는 한 가지 예는 자본주의 전에 존재했던 봉건제 사회다. 우선 봉건제는 이른바 “암흑기”에서 발전을 촉진했다.

로마제국이 붕괴한 뒤, 한때 로마제국에 의존했던 영토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재조직돼야 했다. 이 영토들은 더는 전리품이나 노예 노동의 지속적 유입에 기대 성장할 수 없었다.

서기 1천 년대에 들어서며 새로운 모델이 생겨났다. 평범한 사람들은 농노로 땅 한 뼨에 묶인 채 거기서 농사를 지

어야 했다. 농노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세금을 가혹하게 탈취해 가는 영주에게 묶여 있기도 했다.

서기 1천 년에서 1천3백 년 사이 봉건제 사회가 만들어지며 유럽의 인구가 폭증했다. 1086년 1백만 명이었던 영국 인구는 1386년에는 7백만 명이 됐다.

그러나 결국 봉건제 사회는 바로 이 성공으로 인해 몰락하게 된다. 농노 경제는 불어난 인구와 그 인구를 중심으로 생겨난 도시의 수요를 더는 충족할 수 없었다. 분열해 다트던 지배계급 영주들에게

대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자 1300년대부터는 유럽 전역이 침체를 겪게 됐다. 인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작농과 상업 자본가 등 신생 생산력을 대변하던 계층은 봉건제적 생산관계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 기아와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흑사병의 창궐은 불안정성을 키웠다. 영주들은 농노를 더 심하게 수탈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유럽 전역에 농민들의 반란이 증가했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시

기의 유럽에서는 상부구조에서 치열한 이데올로기 투쟁이 벌어졌다.

종교 개혁을 둘러싼 투쟁, 영국 내전 당시 수평파의 급진 사상, 계몽주의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대변한 철학 등이 그 예다.

봉건제의 위기는 토대에서 시작했지만, 상부구조에서 벌어진 이런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없었다면 봉건제의 몰락은 요원했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18호 / 번역: 조명훈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2013년 1월 2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충남 건설플랜트

단호한 점거로 현대제철의 양보를 얻다

충남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고로 3호기 점거로 현장을 마비시켜, 통폐 하게도 원정 대거업 현대제철을 물러 서게 했다.

이 노동자들은 연간 4백만 톤 이상 의 쇠를 생산할 수 있는 고로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일해 왔다. 현대제철 사 측은 준공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위협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 당했다. 8시간 법정 노동시간은 지켜지지 않았고, 9시간 포괄임금제가 적용됐다. 연차와 휴일 등 법적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3개월 동안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50대 후반의 노동자들이 구조물에 깔렸고, 고압에 감전됐고, 발판 붕괴로 추락해 사망했다. 33세의 젊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도 발생했다.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갖췄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노조



서산출처: 동원건설노동

고로 3호기 점거로 8시간 노동, 유급 휴일 확대 등을 이룬 현대제철 노동자들

는 포괄임금제 폐지, 재해사고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12월 1일부터 고로 3호기를 점거하며 단호한 파업을 벌였다.

경찰이 30여 명을 연행하며 탄압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조합원 약 1천 2백여 명이 매일 집회를 하고 공장을 행진하며 단결된 힘을 과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간부들도 식량과 의약품 등을 보급하는 등 연대

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지에 놀란 현대제철 사측은 8시간 노동, 유급 휴일 확대 등을 양보해야만 했다.

이번 투쟁은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힘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노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도 쟁취해야 한다.

이승현 건설노조 법규국장

전북 버스

7백36일 만에 민주노조를 인정받다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압박해, 임·단협 체결 약속과 노조 인정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12월 2일 고공 농성에 돌입했던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7백36일 만에 민주노조를 인정 받았다.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9일부터 파업에 시동을 걸며 다시 한 번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노동자들은 지난 7월 파업 이후 복귀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사기 저하를 겪고 있었다. 사측은 이를 틈타 다섯 명을 해고하는 등 탄압을 강화했다. 노동자

들에 따르면,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북민주버스 노조가 파업할 수 없게 됐으니, 민주당 중앙은 신경쓸 필요 없다’고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다시 결집했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제안에 따라 조직된 파업에 동참하며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노조는 민주당 대선 후보 문제인의 방문 일정에 맞춰 항의의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문제인은 애초의 계획을 연기해야만 했다.

노동자들은 12월 9일 전면 파업을 벌였고,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지역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이런 투쟁 때문에 직장폐

쇄로 도발을 하려던 한 시내버스 사측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전주시도 이런 정치적 압박에 더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12월 10일, 연내 임단협 교섭 타결, 임금 체불 해결, 노동탄압 중단, 전주시의 보조금 현실화 등 요구를 전격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만 2년 동안 민주노조를 거부해 온 전북고속의 악질적 사측도 민주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이제 임·단협을 공식 체결하고, 노조 인정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병무

박원순의 비정규직 대책을 환영하며

직고용 정규직 전환 확대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2차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됐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천2백3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3월 1천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번 2차 대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초점이고, 이 중 4천 명 이상이 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다. 2년 전 홍의대에서 시작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낳은 성과다.

서울시가 정부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완화했고, 전환 제외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준도 더

높다. 따라서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원정에 직접 고용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일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2015년 이후로 미뤄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주되게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인건비 총액을 정해 임금과 고용을 통제하는 제도인데,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이 제도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서울시도 여기에 발목이 잡혔고, 도전하지 않았다.

120다산플센터 등 약 1만 3천 명이 일하는 민간위탁 부문에 대한 대책도

학교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방과후 코디네이터 4백30여 명이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광주에서도 방과후 전담인력과 생활지도상담사 등 4백35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또, 대구·경남·부산의 사서들도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부산 지부장에 대한 표적 해고도 자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송년회가 송별회가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매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반복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이들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12월 14일 부산·광주·충남·대구 등에서 하루 파업이 벌어졌고, 대전·경북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광주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까지 천막 농성과 광주시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만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집단적인 투쟁을 벌이면서, 더는 약자가 아

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우뚝 섰다. 11월 9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1만 6천여 명이 참가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정점화하고 2013년 호봉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얼마 전엔 전북교육청이 정년연장,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부와 열 곳의 보수 교육감 등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상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해 사기를 꺾고, 자신들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이에 맞서려면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들의 해고 위협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2013년 교육공무직 전환을 위한 투쟁도 한 발 전진할 수 있다.

지금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며 파업·농성·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명지



전남 교사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11월 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유성기업

지역 금속 노동자들의 연대가 확대되다

유성기업 홍종인 지회장이 목에 밧줄을 걸고 농성한 지 55일째 되던 12월 14일, 금속노조 충청권 노동자들이 4시간 연대 파업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열린 충남지부 결의대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연대를 확장해 유성 투쟁 승리하고 홍종인 지회장이 무사히 내려오도록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대전노동청 앞에서 열린 충북지부 결의대회에서도 연대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 구속, 친사용자 노조 해체, 민주노조 사수 등을 결의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11월 말까지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구사대로 동원됐던 한 유성기업 노동자가 최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유성기업 영동지회의 한 조합원은 “유성 사측은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라며

“현장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신현수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어용(친사측) 노조에서 민주노조로 넘어오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그동안 사측의 탄압이 극심했지만, 창조컨설팅의 만행이 폭로되고 노조의 잘못이 없음이 드러나자 노동자들의 사기도 오르고 있다.”

실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최근 산·영동 공장 모두에서 매주 한 차례씩 4시간 파업도 벌였다. 울산 현대차에서 처럼, 농성장의 불씨가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홍종인 지회장도 “현장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충청 지역의 노동자 연대도 확대돼야 한다. 금속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 문제 등을 결고 1월 파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기민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다문화’ 걸치레조차 팽개치는 노골적 인종차별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철회하라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자

정부는 11월 28일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외국인 정책(2008~2012년 시행)보다 훨씬 우경화했고 노골적인 차별과 억압 강화를 담고 있다(반면 ‘부동산 투자 이민’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중국 동포는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 한다.

정부는 ‘1차 기본 계획이 인권·다문화 등의 가치를 강조해 문제를 야기했다’며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제한된 작업장 이동 권리마저 박탈했고, 10월에 경찰과 출입국이 합세해 10년이 넘도록 한국에 살며 학교를 다닌 몽골 청소년을 ‘불법체류자’라며 추방했다. 또 11월에는 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 후 양육권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두 아이를 데리고 동반 투신 자살했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례들에 ‘인권과 다문화 가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그러므로 ‘책임’, ‘기여’, ‘균형’이라는 건조한 단어들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이민자들에 대한 끔찍한 억압과 차별이며, 이주자 속지양 삼기를 제도화해 인종차별을 고무·조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에는 영주권 전치제도(영주권을 얻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단계를 둔 제도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입, 국적 취득 심사 강화, 미등록 단속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출입국 단속반에 집·공장 어디든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 범죄 집단’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이런 정책이 과연 가능하거나 한 것인가.

정부는 이런 노골적으로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제도들을 시행하는 데서, 그동안 내걸어 온 ‘다문화’ 슬로건이 방해가 된다고 본다. 그래서 알맹이 없던 ‘다문화’ 구호조차 뒤흔들고 사라지고 ‘대한민국 공동가치 존중’이 전면에 등장했다.

반(反) 다문화

간단히 말해, 이런 말의 배후에 있는 본질은 ‘이주민이 문제’라는 관념이다. 귀화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공동가치 존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평가하면서, 이주노동자들 중 장기체류자가 늘면서 가족을 불러 오고 정주화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편중된 지원이 ‘반(反) 다문화’ 현상을 불러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치 이런 생각이 ‘국민 감정’인 양 왜곡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조차 이주민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정하고 다문화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헛소리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한다. 동아시아 연구원과 고려대가 2010년 실시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 결과만 봐도 82퍼센트가 ‘속지주의’를 지지했고, 이 추세



차별, 규제, 범죄자 취급 중단하라 9월 23일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모인 이주노동자들. 이들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우리의 이웃이다.

는 계속 증가해 왔다.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 속에 고통받는 대다수 한국인들과, 경제 위기에 최대 매출액을 올리며 빈부격차를 벌찌감치 벌려 놓는 ‘1 퍼센트’ 사이에 한국인의 ‘공동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

정부는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혈안이 된 양 묘사하지만, 정착 이주민을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정부였다. 정부와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한 3D 산업 —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일부 서비스업 — 을 떠맡기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까지 하며 국제결혼을 장려한 것도 바로 지방 정부들이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이 ‘필요’에 사

용되도록 철저히 통제·관리해 왔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그리고 작업장 변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을 연장해 9년 8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장기간 동안 가족 초청은 불허된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체류자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도 이주노동자는 신청하지 못한다.

결혼 이민자 지원도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족제도 안에서 적응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었다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정 폭력은 더 늘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7명 폭로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주민과 결혼하는 한국인들 다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몰려 있는데, 복지 부담 운운은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정부가 결코 말하지 않은 진실은, 대다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난민이든, 이주민들은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는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가 재정 부담 운운하는 것은 그야

말로 파렴치하다.

정부의 정책은 인종차별적 편견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정책은 이주민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안겨 주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촉진할 것이다. 결국 이것의 수혜는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소수 기득권층에 돌아간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인종차별적 반(反)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분열이 아닌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야 한다.

속지주의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이주민에 대한 무전유죄 재판입니다”



이 글은 티베트 출신 이주민 민수 동지(사진)가 12월 26일로 예정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작성한 탄원서를 요약한 것이다.

저는 지난 2008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곳은 세 아이와 장애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가족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2011년 4월 25일,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임신 중인 아내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저 역시 여기저기 돈을 빌리면서 안간힘을 짜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현실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2011년 9월 9일 새벽 용역 수백 명이 몰려왔다는 소식에, 임원이 있던 아내는 환자복을 입은 채 달려왔고 저도 잠자다 말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크레인인 포크레인을 건물 위에 올린 상태였습니다. 저

는 방송차(음향차)를 가지고 그곳에 왔는데 당시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몰랐습니다.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용역을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용역을 십여 명이 음향차에 달려들어서 앞유리를 부수고 운전석 옆에 있던 아내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용역들의 손에 음향차 밖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옆에서 그걸 본 남대문 경찰서 류진수 형사가 112에 신고해 줄테니까 가서 고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동파출소에서 고소장을 쓰고 있을 때 용역 2명이 파출소에 왔습니다. 다리를 찢먹거리면서, ‘차에 치었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파출소에 있던 경찰이 못 나가게 문을 막으면서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맞아서 고소하러 왔는데 왜 제가 현행범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풀려나고 저는 체포됐습니다. 검찰 측에서 증거자료라며 저한테 당시의 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제가 차 끌고 간 것만 있고,

차가 부서지고 제가 맞은 것, 아내가 구급차에 실려간 장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어떻게 제가 차 끌고 간 부분만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외국인인니까 모든 일들이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항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류진수 형사에게 알아 보니, 그들은 신고 안된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법을 어겨도 눈감고, 누군가는 맞고 당해도 법을 어겼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왜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화를 준비했는데 재판 때문에 그것마저도 지금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1만 원만 나와도 귀화가 근 십 년 동안 안 된다고 합니다. 서민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법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저는 한국사회에 묻고 싶습니다.